

국정뉴스



2019 서울안보대화(SSD) 개최

53개국 7개 국제국방기구 관련자 700여 명 참가

국방부는 9월 4~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서울안보대화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 다양한 안보위협과 현안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한 아·태 지역의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함께하는 평화: 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총 53개국과 7개 국제국방기구의 국방고위층, 안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의 학자와 전문가 등 약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아웅산 폭탄테러 희생자 추모비 참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6일 5박 6일간의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을 순방했다. 이번 순방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했다.

9월 2일 문 대통령은 태국에서 빠라웃 짬오차 총리와 정상 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 9월 3일에는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면담하고 '아웅산 묘역 순국선열 추모비'를 참배했다. <사진> 9월 5~6일에는 라오스를 방문, 분당 보라치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수력발전 등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거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57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평화체제' 하의 유엔사 존속, 진지한 검토 필요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 특전사령관

한반도는 늘 긴장 상태에 있다. 북한의 6·25 남침 전쟁 이전에도 이미 남북은 크고 작은 전투를 38선을 연해서 벌이고 있었다. 6·25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끊이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강한 응징의 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원칙이었다. 우리의 강력한 대응과 대비의 밑바탕에는 여차하면 제2의 6·25 전쟁에 대한 가능성과 위협성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지역 정세의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의 만류와 우리의 경

제발전 지향에 대한 절실한 정책 목표가 '속 시원한 응징보복' 대신에 '강력한 응징의 천명과 다짐'이 반복되곤 했다.

이러한 위협이 수십 년간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전쟁으로부터 막아 온 기구가 유엔군사령부다. 지금도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권

계 보면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가 남북한 간 접적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긴장완화 기구이자 채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앞으로 만일 유엔군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없어지게 된다면 차후에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였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평화협정은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고 다시 전쟁으로 돌아간 예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와 다른 편의 때문에 유엔사를 한반도에 남기는 것이 유엔사나 특히 미국에게 종속되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조차 유엔사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의 허수아비 기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제1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하는 착각을 일으킨다. 미국이 우리 사회를 일방적으로 이끌던 시대는 끝났다. 자신감을 갖고 유엔사와 미국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듯 앞으로 유엔사의 존속 문제는 동북아 주변 국가들 간의 강대국 힘의 논리에 좌우되기 보다는 우리 안보의 실리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평화협정이 한낱 종잇장에 불과했던 경우 많아 제3자적 입장에서 관리역할 해줄 누군가 필요해

한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이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이른바 '100배 응징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것도 유엔군사령부였다.

쉽게 말해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 북한군에게 전략적 타격을 통해서 간담을 서늘하게 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유엔사의 감시와 점검으로 인해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

을 때 그야말로 '100배 응징보복'이나 '1000배 응징보복'이 실행에 옮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더라도 유엔사를 존속시켜야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즉 지난날의 정전협정을 넘어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누군가는 제3자적 입장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